

KWDI

해외통신

2020년 7월 2차 (2020.7.16 ~ 7.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 CANADA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어린이집의 코로나 대응 현황 조사 결과 발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는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공공부문을 비롯한 상당수 직장들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거나, 학교 및 돌봄기관이 운영을 중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적돌봄 중단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돌봄기관들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아이돌봄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6월 30일 공개하였다. 이 조사는 주정부 소관 기관들과 어린이집 연합 등 기관들이 지역의 아이돌봄 기관들을 섭외하여 5월 4월~5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아이돌봄 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4월 27일~5월 1일)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총 8,300개의 돌봄기관(어린이집(child care centre) 5,729개, 가정식 어린이집(family child care homes) 2,571개)이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 중 마니토바와 사스카툰, 누나부트 기관들은 대부분이 국공립 비영리 기관들이었으며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45% 이상이 사립 기관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캐나다 전역이 비슷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음을 드러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캐나다 전역에서 72%의 어린이집이, 39%의 가정식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나 그 비율은 주별로 상이했다. 노바스코시야주의 경우 100%에 가깝게 아이돌봄 기관들이 문을 닫았으나 알버타의 가정식 어린이집은 15%, 사스카툰의 어린이집들은 33%만이 해당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캐나다 전역에서 응답 기관의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나 온타리오주 어린이집의 경우 72%가 오히려 운영시간을 늘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 돌봄 체제를 운영하여 지정한 아이돌봄 기관들로 하여금 운영 시간을 늘리게 한 데서 기인한다.

참고자료

- Statistics Canada(2020.06.), "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 Parenting During the Pandemic", <https://www150.statcan.gc.ca/n1/en/pub/11-627-m/11-627-m2020043-eng.pdf?st=8VEM8bMW> (접속일 : 202007.20)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30.), "Canadian Child Care: Preliminary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Canadian-Child-Care-COVID19-Survey-Data-Report.pdf> (접속일 : 2020.7.20.)
※ 상세 보고서

코로나19 사태가 아동 돌봄기관에 미친 타격 또한 지역별로 상이했다. 2020년 5월 현재 응답한 어린이집의 64%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설을 다시 열 것이라고 답했으나 36%는 확실치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더 작은 가정식 어린이집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들의 68%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 54%는 정부 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덜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알버타의 경우 57%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겼으나 퀘벡과 뉴브런즈윅, 사스카툰 등의 지역에서는 응답 기관들의 50% 정도가 평소와 다른없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한 어린이집의 71%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들을 임시 해고한 상태라 밝혔다. 응답 기관들의 29% 만이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4%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급에서 직원들이 해고된 상태였다. 한편 이렇게 임시 해고된 아이돌봄 인력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해고 인력의 87%와 64%가 각각 주정부의 캐나다 긴급 재난 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혜택을 신청했지만,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인력들의 경우 37%만이 이러한 재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상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돌봄 체계를 정상화함에 있어 아이돌봄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식 어린이집 모두 시설을 재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 즉,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줄어든 원생 수를 공통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임대비 지원, 임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회복에 충분하다고 답한 어린이집은 4%에 그쳤고, 응답 기관의 55%는 어느 정도(somewhat, mostly)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04.), "THE PANDEMIC EXPERIENCE HAS CREATED AN UNCERTAIN FUTURE FOR CANADIAN CHILD CARE SERVICES",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The%20pandemic%20experience%20has%20created%20uncertain%20future%20for%20Canadian%20child%20care%20services_Highlight%20of%20a%20national%20survey_FINAL_CRRU.pdf (접속일 : 2020.7.20.)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여성전용 교수 채용공고 '평등법 위반' 입장 발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19년 6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공과대학교(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이하 에인트호벤 공대)는 교수진(faculty)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교수진 공개채용을 5년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바 있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약 2,000여명에 가까운 연구인력과 약 12,000여명의 학생들(2018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내에서는 대외적으로 매우 저명한 공과대학이다.

참고자료

- College voor de Rechten van de Mens(2020.07.03.), "College oordeelt over voorkeursbeleid TU Eindhoven", <https://mensenrechten.nl/nl/nieuws/college-oordeelt-over-voorkeursbeleid-tu-eindhoven> (접속일 : 2020.07.22.)

위와 같은 계획이 포함된 에인트호벤 공대의 '이레네 큐리 펠로우십(Irène Curie Fellowship)' 프로그램은 채용공고 6개월 동안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이후 적합한 여성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남성에게도 지원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에인트호벤 공대 내 여성 교원 비율은 낮은 편으로, 2018년 기준 교수(professor) 14%,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13%, 전임 교수(assistant professor) 24%가 여성이다. 이는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지역 내 대학과 비교해도 여성교원 비율이 최저수준이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그동안 교원 성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과에 여성 교수 비율 30% 달성할 때까지 에인트호벤 공대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 교원 채용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달 초, 네덜란드 인권위원회(College voor de Rechten van de Mens, CRM)에서 에인트호벤 공대의 해당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평등대우법(Law on Equal Treatment)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9명의 이사회 임원, 그리고 변호사, 연구원, 정책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으로, 이사회 임원들에게 매년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정부로부터 예산은 받으나 인권법(Act on Human Rights)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인권 관련 자문 및 정책관련 제언을 제공하며, 독립기관으로의 권리와 활동을 보장받는다.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여성과 같이 특정 사회적 카테고리를 우대하는 정책은 엄격한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 동등대우법에 따르면, 우대정책은 채용에서 여성 전용과 같이 여성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 과학자 배출이라는 큰 목표 하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 절차에서부터 여성만 지원 가능한 것은 남녀 동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인트호벤 공대 학과별로 남녀교원 비율이 상이하고, 최근 몇 년간 일부 분야에서는 해당 우대정책 없이도 여성 과학자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 발표와 더불어, 네덜란드 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 과학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 대학들은 에인트호벤의 이번 정책보다는 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교내 채용인사위원회 인식 제고, 여성 과학자 대상 연수 및 연구 재정지원 등이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으로 에인트호벤 공대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켜볼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 Dutch News(2020.07.03.), "Eindhoven University loses sex discrimination case over women-only job ads," <https://www.dutchnews.nl/news/2020/07/eindhoven-university-loses-sex-discrimination-case-over-women-only-job-ads/> (접속일 : 2020.07.22.)
-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Facts and Figures 2019," https://assets.tue.nl/fileadmin/Facts_and_Figures_2019.pdf (접속일 : 2020.07.22.)
- The Guardian(2020.05.29.), "We are losers in this crisis": research finds lockdowns reinforcing gender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y/29/we-are-losers-in-this-crisis-research-finds-lockdowns-reinforcing-gender-inequality> (접속일 : 2020.07.22.)



영국, 경제적 통제도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법 하원 통과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2020년 7월 6일, 영국 하원은 신체적 폭력만 포함하는 전통적인 가정폭력의 정의를 넘어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 법안(Domestic Abuse Bill)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려면 앞으로 상원(House of Lords) 통과와 왕실 재가(Royal Assent) 절차가 남아 있다.
-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외에도 경제적 폭력(economic abuse), 강압과 통제, 교묘한 비신체적 폭력(manipulative non-physical abuse)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방안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법안은 지자체와 사법기관,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을 감독하는 가정폭력 위원직을 신설하고, 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금지, 가해자 행동 교정 훈련 등을 강제하는 가정폭력 보호 공고(Domestic Abuse Protection Notice)와 가정폭력 보호 명령(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안전한 쉼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금지, 가정폭력 피의자 석방 조건으로 심리·생리검사(polygraph testing, 거짓말 탐지기) 실시 등 내용도 추가되었다.
- 영국 정부가 가정폭력법을 발의한 것은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무성이 2020년 3월 발간한 '가정폭력법안 주요 팩트시트(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에서는 16~74세 연령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연간 240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3분의 2가 여성이다. 또한, 경찰에 신고된 범죄 10건 중 1건이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며 가정폭력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은 해당 보고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660억 파운드(우리 돈 약 98조 30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민자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을 돕는 단체 50곳과 이민자 인권 단체, 앰네스티 영국지부 등이 연합해 이끄는 캠페인인 'Step Up Migrant Women'은 영국 정부의 가정폭력법안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가정폭력법안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석 달간 금전적 혜택을 포함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여성처럼 배우자 비자가 없거나 다른 종류 비자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
- 흑인과 소수 인종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Southall Black Sisters의 대표 프라그나 파텔은 2020년 7월 6일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여성이 배제된 이번 법안이 던진 메시지는 이민자 여성의 삶이 가치가 없고, 2등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고자료

- GOV.UK(2020.07.07.), "Domestic Abuse Bill passes House of Commons", <https://homeofficemedia.blog.gov.uk/2020/07/07/7626/> (접속일 : 2020.07.15.)
- GOV.UK(2020.03.03.), "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 (접속일 : 2020.07.15.)
- The Guardian(2020.07.06.), "Migrant women deliberately left out of UK abuse bill, say campaign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l/06/uk-government-accused-endangering-lives-migrant-women-domestic-abuse-bill> (접속일 : 2020.07.15.)